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하며 "송구스럽다"에

"朴, 반성 기미 없어" vs "많이 절제"

민주당 "법 앞에 모두 평등… 檢 명예회복 마지막 기회"
국민의당 "朴, 반성 안 해… 증거인멸 우려 더욱 가중"
바른정당 "국민에 진정성 있는 사죄 표하지 않아 유감"
정의당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 불성실에 국민 허탈"
자유한국당 "朴, 절제된 언사… 檢, 실체적 진실 밝혀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하며 "송구스럽다"는 간략한 메시지만 내놓은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박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인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이 많은데 절제했다'며 결이 다른 반응을 보였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 헌재의 출석을 피해왔지만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이라며 "탄핵된 이후 이런 사태까지 온 데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죄하는 태도와 진실 규명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익을 취한 적도 없고, 잘못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검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번 청와대에서 퇴거하면서 강력한 불복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된 부인을 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또한 이번이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며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검찰이 엄정하게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이후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탄핵국면도 수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무성의한 발언 두 마디만 내놓은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직위나 정치적 책무의 엄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정치적 책무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그 부분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탄핵선고에 대해 수긍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증거인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결정을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보다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원했건만 끝끝내 형식적 입장만을 밝힌 채 검찰청사로 사라졌다"며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로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 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검찰 수사 및 특별검사의 소환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도 출석할 기회가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음으로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다. 만시지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으로서 최소한의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다시금 허탈하게 만드는 말이었다"며 "무엇이 송구스러운지조차 없는 불성실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공언한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특검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들 4당과 달리 '전직 대통령 예우' 운운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하실 말이 많았겠지만 오늘 굉장히 절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의 검찰 출두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국가적 비극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며 국민께 송구스럽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만큼 오늘 검찰 출석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신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검찰은 어떤 외압이나 외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가적 품격과 국민 통합을 고려해 조사과정 전후해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블랙리스트' 김기춘 4월6일 첫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첫 재판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먼저 증언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1일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는 4월6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재판에서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 변호인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오후에는 유 전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증거 관련 입장을 듣고 지난달 28일 시작해 세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했다. /뉴시스

시·도의회의장협, 박지원 대표 방문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면담을 갖고 시.도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황현 도의장 등은 건의서를 통해 "사회가 급변하고 행정역시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으나 도의회의 일처리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별로 없다"며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전문성이 취약해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광역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자체 감시.견제 역할을 하지만 단 한명의 보좌인력도 지원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광역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협의회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한 차원에서 현재 '법령의 범위 내'인 조례제정권을 확대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단체장이 내정한 인물에 대해 지방의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함으로써 보은인사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실을 사전에 막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황현 도의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라며 "지방의회 정착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장미대선' 40여일 앞으로 … 전북 문전 성시

홍준표·안철수·손학규 후보 방문… 전북 '몫' 장미빛 공약 쏟아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손학규 후보

장미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가 전북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지사는 "당을 배척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에서 날 배척할 이유가 없고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전북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홍 지사는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판단할 때가 됐다"며 "특정정당에 몰표를 줘서 전북이 과연 뭘 얻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이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새만금을 홍콩처럼 중국의 체제하에서도 별개의 체제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우정연수원 개관식에 참석해 지지층 공략에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저는 본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 누구보다 개혁과 동시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박주선 국회부의장보다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니면서 많은 분을 만나 뵙겠다"며 "누가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누가 제대로 개혁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지 지역위원장 및 시.도의원, 공무직 근로자, 노인계층을 면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전주-남원을 연결하는 관광문화루트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과 전북의 핵심 추진산업인 탄소산업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먹거리 걱정없는 식량주권시대를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 후보는 "전북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며 식량주권의 고장"이라며 "전북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농지천하지대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식량주권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융합으로 먹거리 걱정없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후보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프로젝트 추진, 농생명 특화 국제금융 허브 조성,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 추진 등 전북도 요구안을 반영한 전북 맞춤 공약도 제시했다. /안재용 기자

정동영, 임대료 '2년 5%' 법 발의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 범위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료 증액을 '연5%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하여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안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